

북한의 과학기술은 오랜기간 수령독재의 지침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활용되어졌다.

이른바 홍(紅)과 전(專)의 대결에서 이념성을 강조하는 홍(紅)의 압도적 우위에서 전문성은 부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이것은 홍과 전의 수 십 년간의 경쟁과 대립 속에서 문화혁명의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전(專)이 승리하여 개혁·개방의 시대를 맞이한 중국의 사례와 정반대의 경우인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확립과정에서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상적 검증을 강화하여, 당장 당과 인민에게 봉사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과학기술을 위한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규모 숙청작업을 단행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90년대말 핵무기개발 등 강성대국건설이 국가목표로 설정되면서 「군사·경제 병진노선」은 「군사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복무노선」으로 변경되었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전략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이 될 때까지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통일 이후의 협력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박성현원장의 발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의 협력사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였다. 제시된 12개 연구분야는 매우 심사숙고한 결과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분야에서 남북한 협력방향을 정하는 것은 미묘한 것이다. 남한에서 아무리 북한의 과학기술발전을 돕고 협력하고 싶어도 그 도움의 결과가 북한의 군사력증강으로 직결된다면 한반도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통일전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이다.

통일 전의 남북한 과학기술분야 협력은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군사력증강을 위한 것이 아닌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력을 무 자르듯 선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 식량, 의료보건, 생태계 등 북한주민의 영양과 건강, 환경을 위한 협력은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이 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일이후의 협력사업은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근본적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민족

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전이라도 전쟁을 겪지 않았고 평화적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 전 동독은 서독인구의 1/4, 국민소득 역시 서독의 1/4에 달했으므로 남한인구의 절반이 넘는 북한인구, 남한국민소득의 1/10에도 못 미치는 북한주민소득을 비교하더라도 통일 이후 남한이 저야하는 통일비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지 참고사항은 통일 전 동독은 구소련·동구권 전체 산업생산의 44%를 담당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기술과 관련된 무기제조 등은 전적으로 소련이 독점하는 체제였다. 구소련·동구권의 분업체계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동독의 군사력증강에 유용되리라는 두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갖는 이질성으로 인하여 통일이후의 동서독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은 일단 동독과학기술체계의 해체와 서독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단계로 이행되었다.

독일의 과학기술통합과정은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인력의 불합리한 배분, 낙후된 연구시설 등을 극복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였다. 즉 정부중심의 동독 과학기술체제를 일단 해체 한 후 서독체제에 편입하는 연방제 형태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동독 연구기관의 핵심인 과학아카데미를 해체하는 대신 새로운 체제의 국공립 연구기관들을 신규 설립하는 동시에 대학연구의 활성화하였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동독은 분단 이전의 세계적 과학기술연구의 중심이었던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산업발전과 연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덧붙여 통일 이후에 중앙집중식 연구체계 대신에 분산된 다양한 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동서독 간의 연구개발성과의 격차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최신 첨단 분야의 연구역량을 동독지역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관계로 동독의 특정지역이 연구중심이 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동서독의 경우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협력을 통한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기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조건 가운데에 인도적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협력과 통일 이후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협력은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